

난민 혐오 반대 카드뉴스 ①

**난민에게 전혀
‘인도적’이지 않은 한국 정부**

최근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난민 혐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

— 브리핑 —

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, 무
사증 입국, 난민신청허가 폐지/개헌 청원합니
다.

참여인원 : [714,875명]

카테고리 외교/통일/국방

청원시작 2018-06-13

청원마감 2018-07-13

청원인 naver-***

청원시작

청원진행중

청원종료

브리핑

**우익들은 무슬림 혐오에 기반한
‘가짜뉴스’를 퍼뜨리고 5차례 집회도
열었죠.**

“테러 위협이 커진다”

“범죄와 성폭력이 늘어날 것”

“일자리를 뺏어간다”



문재인 정부는 이에 “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” 난민법을 개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(6월 29일, 8월 1일 법무부)



그 결과

예멘 난민에 대한

1, 2차 심사로

난민 지위가 인정된

신청자는

0명

339명은 '인도적 체류' 허가만,

34명은 아예 '난민 불인정' 결정...

**‘인도적 체류 허가’는 불안정한 체류
말고는 보장하는 게 없고, 이마저
수개월마다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.**

“한국에서 숨만 쉴 수 있게 허가해주는 것”
(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)



우익들은 이마저도 ‘지나치게 관대
하다’며 “강제송환”이라고
주장합니다.



그런데 과연 한국이
‘난민에게 관대한 나라’ 일까요?

전 세계에서
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
난민은(2017년 기준) **2천 540만 명**

(유엔난민기구(UNHCR) 발표)



**그 중에서 단 0.17%만이
한국에 왔을 뿐인데도...**

(1994년부터 '누적해서' 4만 명)

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

4.1%

에 불과합니다.

(전 세계 난민 인정률 37% - 유엔난민기구)

난민 지위를 신청해도

- ✓ 부정확한 통역, '가짜' 난민 속아내기식 불공정한 심사, 박해의 입증책임 전가
- ✓ 6개월간 취업금지, 쥐꼬리만한 생계비마저 지급대상자의 3.2%만 수령(2017년 기준)
- ✓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없음
- ✓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민 심사

⋮

난민들이 겪는 고통은
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



전쟁과 가난,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한국 정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!



난민 혐오 반대 카드뉴스 ②는
‘무슬림은 테러와 범죄를 일으킨다?’ 라는
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!

